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협찬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T 02-398-3595 E onekorea@dyna.co.kr W http://www.onekorea2017.co.kr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

2017. 6. 29 목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주최



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국제 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평화 통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는 커녕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 아래 북한에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국제 사회와 협력토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평화 통일과 또한 통일이 가져올 미래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반만년 유구한 단일 민족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마치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거나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식어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박노황

연합뉴스는...

연합뉴스는 국내 최대 취재망을 가동해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통신사입니다. 사실에 바탕을 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헌신합니다.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됐으며, 이 법에 따라 '정보주권 수호' 등 공적기능을 담당합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른 공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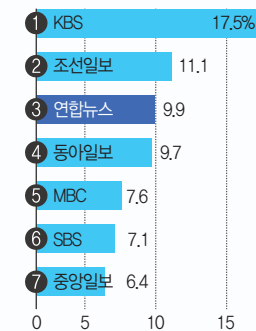
연합뉴스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일반 언론사가 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목적의 가짜뉴스와 클릭수를 높이려는 어뷰징(abusing)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신속·정확하고 불편부당한 뉴스로 중심을 잡는 역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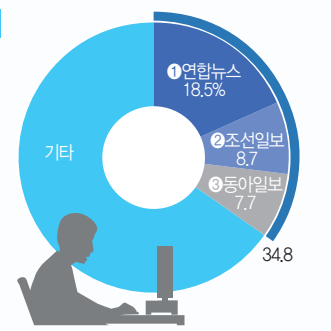
24시간 뉴스의 산실...압도적 영향력

연합뉴스의 취재망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하루 생산하는 뉴스콘텐츠가 3천여 건을 웃돕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연합뉴스의 영향력을 언론사 3위로 규정할만큼 여론 형성 기여도가 높고 인터넷 뉴스 점유율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연합뉴스는 이런 역량을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역할 수행에 집중할 것입니다.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



인터넷 뉴스 점유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도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을 주제로 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고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해법에 대해 기초연설과 주제발표, 토론을 하게 됩니다.

- 세션 1** 세션 1의 주제는 '새 정부 외교·안보·대북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회복 등 만만치 않은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 방향이 소개됩니다.
- 세션 2** 세션 2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입니다. 핵·미사일 고도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 세션 3** 세션 3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분야 석학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프로그램	
개회식		
13:00~14:00	기초연설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실천 천해성 통일부 차관
14:00~14:50	Session 1 새 정부 외교·안보·대북정책 추진 방향	발표1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당당한 협력외교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2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발표3 대북정책 추진 방향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14:50~15:00	Break Time	
15:00~15:50	Session 2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	발표1 북한 핵 문제 실태 및 해결방향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2 동북아 신평화지도 구상 신봉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초대사무총장 前 요르단 대사
		발표3 최근 북한 정세 진단 및 변화전망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15:50~16:00	Break Time	
16:00~17:00	Session 3 패널토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좌 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패 널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소장

*상기 프로그램은 행사 사정에 따라 추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세부프로그램 안내

기조연설



천해성 통일부 차관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실천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관계에서도 대화와 교류 재개를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적 합의의 기반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Session 01 새 정부 외교·안보·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1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당당한 협력외교

최종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과 당당한 협력외교”의 발표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3가지 키워드인 책임, 협력, 공정이 어떻게 문정부의 안보관을 투영하고 있는지 논의한다. 특히 최교수는 지속가능한 한미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주요 현안인 대북문제와 평화적 해결, 한미 FTA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최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제재 뿐만 아니라, 관여를 포함하는 균형된 정책 방향을 지향한다고 하며, 대북정책 메뉴판을 풍성하게 하여, 북한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웅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발표 2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때에 정권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GDP의 3%까지 국방비 지출을 증대시켜 공세적 억제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인력은 적으나 전력은 극대화되는 효율적인 군대체계를 만들고,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국방정책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도모함으로써 혁신적인 국방정책기관을 만들고자 한다. 장병들의 근무여건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군의 인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군대를 만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접목시킴으로써 첨단 방위산업의 육성과 군대 인프라의 정보화와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발표 3 대북정책 추진 방향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는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은 높아지고 남북관계 경색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목표로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설득·압박하여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남북 단일시장과 경제통일을 실현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야·정·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Session 02

한반도 평화와 북한 변화 유도전략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표 1 북한 핵 문제 실태 및 해결방향

북한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핵능력 강화를 통한 핵 보유국 지위획득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기 위해 지역자강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평화협정-핵군축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은 최대치의 압박-관여 프레임, 중국은 제재-대화 병행(쌍궤병행) 프레임, 한국은 대화-협력 프레임, 일본은 대화-협력 프레임의 온도차, 제재의 한계와 등가적 보상의 문제, 그리고 미중 영향력 경쟁과 주변국 견인정책이 북한 비핵화의 주요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북핵 해결방향과 전략은 점진적·단계적·포괄적 접근방법과 남북 평화안보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이다. 북핵 해결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는 정부는 3종의 딜레마(북핵 딜레마, 동맹 딜레마, 시지프스의 역순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 환경의 유연성(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추진 경로의 유연성 확보, 북핵 해법과 남북관계 진전의 상대적 차별화 전략 구사, 점진적 대북 관여와 절제된 억지력 병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신봉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초대사무총장 전 요르단 대사

발표 2 동북아 신평화지도 구상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동북아 이해관계국들간 복잡한 갈등 구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 안보불안의 핵심 요인인 북한문제 해결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이 긴요한 실정이다.

‘동북아 신평화지도구상’은 북한이 핵에 집착하지 않고 생존에 자신감을 가질수 있는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에 북한을 포함한 새로운 평화질서를 수립하려는 중장기적 정책 구상이다. 이 구상은 1. 북핵문제 관리 및 해결, 2. 동북아 다자협력체제 구축 등 두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핵과 미사일의 동결을 시작으로 궁극적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기존의 한중일 3국협력 메카니즘을 대폭 강화하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협력체제로 발전시킨다. 안보 이슈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이 다자협력의 용광로속에서 녹여나간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발표 3 최근 북한 정세 진단 및 변화전망

북한 정치는 수령제라는 인격적 지배의 특성과 불어, 당의 제도화와 세대교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제재라는 대외적 환경제약 상황에서, 내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부가 시장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 불균형과 지역별 불균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문지기 국가’와 ‘분절적 개혁’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최대의 압력에 맞서 최대의 억지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국면에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 진전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협력과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ession 03

패널토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좌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패널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패널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



패널

고유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소장